

민선8기 1년...  
경기도지사 매니페스토에 담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의제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 "약속-협약"

## 발제 및 토론

발제 : 민선8기 경기도정 1년 평가 \_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 \* 토론1. 경기도 정책수석보좌관실
- \* 토론2.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_권달주 상임공동대표
- \* 토론3. 경기여성연대\_오영미 상임대표

## 일시 및 장소

2023. 08. 09. 오후3시  
경기도의회 지하1층 중회의실2

---

주최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선8기 1년,

## 매니페스토에 담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의제현황 분석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 정 아

본 자료는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였던 김동연지사와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정책협약(2022.05.04.)한 내용을 중심으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2022.12.29.기준)를 모니터링 한 결과<sup>1)</sup>가 반영되었다.

‘2022 제8회전국지방동시선거’ 과정에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방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로 진행되어 그 결과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목적에 따라 사회적 의제해결을 위한 핵심과제 5개, 분야별과제 31개를 마련하여 당시 경기도지사후보들과 정책협약을 한 바 있다. 현 경기도지사 김동연 또한 협약에 참여했으며 주요 의제들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공약반영 여부는 향후 연대회의가 모니터링 해나가 정책방향의 실효성을 담보해 갈 동인이 될 것임을 밝힌바 있다.

연대회의가 5개의 핵심과제를 도출하며 던진 질문은 ①경기도민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가, 재난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실행 조건을 마련하고 있는가 ②경기도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직접민주주의의 확장과 속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선 8기 혁신적인 경기도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해 낼 수 있는가 ③이미 기후위기는 여러 징후로, 누적되어 나타나고 있다. 도민 삶 전체를 관통해야 하는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전환 정책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는가 ④사회적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시대 반영이라는데 경기도는 돌봄노동의 노동권과 이용자의 사회권의 균형을 통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돌봄’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가 ⑤경기도형 혁신 주택정책 시행을 통해 무차별적인 개발논리로부터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개혁과 공공성 강화를 담보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였다.

여기에 더해 각 분야별 과제로, 경기도가 인권 도시로써 가져야 할 기본 정책방향 세우기/도민 일상의 안전에 관한 과제 실현을 위한 정책 공약화/사회혁신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 낼 행정추진체계 강화/평화·통일에 관한 과제로써 경기도 민관평화통일 협

1) 본문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정책모니터링TF를 구성하여 경기시민연구소 올림,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다산인권센터가 참여했으며 경기환경운동연합,경기민예총,YWCA경기지역협의회가 의제별 모니터링에 함께 하였음을 밝힘. 핵심과제와 일반의제를 구분하지 않고 모니터링하였음. 총평에 쓰인 제안배경 등은 2022전국지방동시선거 정책제안서를 참조하였음을 밝힘

력기구 마련을 포함하여 다양한 도민참여 확대 가능한 토대마련/문화 협치 플랫폼구축 요구... 그리고 교육정책 개혁에 도정의 적극 개입 요구 등이었다.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의하면 전체 공약 수는 295개, 공약반영된 예산 총액은 38조4,418억원(도비 8조 865억 원)이다. 분야별 공약은 크게 9개분야로 ①성장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49개 ②주택·교통·일자리가 유쾌한 경기42개 ③문화·예술·여가가 일상이 되는 경기 25개 ④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경기 67개 ⑤미래세대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 20개 ⑥북부에 변화와 평화의 기회를 만드는 경기 15개 ⑦소통·협치로 만드는 자치경기 28개 ⑧기후위기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24개 ⑨사회적가치,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 25개 등으로 나눠 배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95개 공약 가운데 연대회의와 협약한 내용을 살펴보는데 있어 유사한 사업 내용까지 '반영'으로 이해하고 사업명-목표-내용-추진계획-소요예산 등을 점검하였다.

## 1. 공약반영 현황(부분반영 포함)

### 1) 사회혁신 생태계조성 및 도시주거정책

연대회의 주요 의제		민선8기 공약반영 정책사업	
의제명	주요 내용	정책사업명	주요 내용
경기도 혁신도정위원회 운영 및 협치체계구현 (핵심과제)	①가칭)경기도 혁신도정위원회 구성	220. 경기도정혁신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민선8기 공약관리 전담기구 설치</li> <li>· 개요: 경기도 도정혁신위원회 구성(15명 내외(위원장 2, 위원 13))/민선8기 공약과제 이행 관리</li> </ul>
	②총괄 전담 조직 설치 및 협치시스템 구축		미반영
시민사회활성화 및 공익활동증진 (사회혁신)	①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미반영
	②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강화		미반영

	와 시군으로의 확대		
	③경기도민주시민 교육의 강화		미반영
	④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한 지역 재단 설립지원 등		미만영
	⑤ 사회적가치 추구형 비영리 일자리 육성 및 지원		미반영
경기도형 사회혁신생태계 조성 (사회혁신)	①문제해결형 사회혁신 생태계 기반조성  -사회혁신추진단 구성(행정추진조직) -사회혁신센터 설립(중간지원조직) -사회혁신기금 조성(사회투자재단 설립)	271. 옛 경기도청 부지에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	▶ 목표 : 舊 도청사 도민 개방/ 다양한 사회혁신 선도하는 실험·체험공간으로 조성, “변화의 중심·기회의 경기” 거점 조성/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향유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 경기도의 자산을 도민과 함께 나누는 “경기기회공간”으로 조성  ▶ 개요 : 옛 도청사를 사회혁신 창출·도민 참여·문화예술 향유 복합 공간으로 조성 - (사회혁신) 장애인, 청년, 소셜벤처 등 사회혁신 기회와 체험 거점공간 구축 - (도민참여) 전 연령층과 세대가 융·화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조성 - (문화예술) 옛 도청사의 시·공간적 유산 보존과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 주변 지역과 상호 작용 및 인프라 연계를 통한 지역공동화 방지
		272. 사회적금융 전	▶ 목표 : 사회적가치 지향 스타트업·스케일업 육성을 통한 사회혁신경제 확산· 사회적자본

		<p>문기관 육성 및 사회투자기 금 조성</p>	<p>투자 인프라 조성으로 융복합 사회난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토대 구축정책</p> <p>·개요 : 지속가능한 사회혁신조 직 성장지원 구조 설계로 사회 적금융 활성화 도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혁신조직의 도약과 지속 적 성장을 위한 전문 중개기관 운영</li> <li>- 사회혁신조직과 사회적가치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사회 투자기금 조성</li> </ul>
		<p>273. 공공성 높은 분야를 사회혁 신경제로 전략 산업화</p>	<p>· 목표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 여 민간기업 ESG 유치, 사회혁 신조직 창출, 각종 자원연계 및 액셀러레이팅 추동할통합지원법 인 설립과 기능 활성화/공공성 높은 분야의 중장기 육성을 위 한 장기시설자금 융자</p> <p>·개요 : 도민의 삶과 직결된 들 봄, 보건의료, 자원순환, 주택 등 공공성 높은 분야를 사회혁 신경제 전략 산업화 및 집중 육성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기업 ESG, 사회혁신조 직, 공공자원(사회적경제기금 등)을 융합하여 더 나은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변화와 기회 창출</li> </ul>
<p>성평등추진체 계실효성 강 화(사회혁신)</p>	<p>시/도지사 직속 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배치</p>	<p>154. 젠더정책협력 기반강화</p>	<p>· 목표 : 시·군 양성평등정책의 균형적 발전을 지원하는 젠더전 문관 배치 지원/ 도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성인지정책 마련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시민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요: 시·군 젠더전문관 배치 지원/ 젠더전문관 확대를 위한 도-시군 젠더정책 협력 기반강화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시군 여성정책 담당 실국장 회의 등) / 시군 젠더전문관 배치 현황 관리</li> </ul>
	경기도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리직, 여성 임원 확대 목표 상향조정	286. 공공부문 여성 관리직 비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연차별 여성관리자 목표비율 달성을 통한 유리천장, 유리벽 제거 도모</li> <li>개요: 실질적 성평등 조직운영을 위한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연차별 확대</li> <li>* 관리직 :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li> <li>- 도 27개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연차별 확대</li> </ul>
경기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경기도형 혁신 주택 정책시행 (핵심과제)	<p>①경기도형 서민 주거안정 정책개발 및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임대주택 확충</li> <li>토지임대부분양 주택 도입</li> <li>주거안정을 위한 시범사업 적극 추진</li> </ul>	53.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호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주거비용 저감을 통한 경기도민 주거권 보장 및 청년 계층 주거사다리 구축. 3기신도시 및 신규 택지개발 등을 활용한 주택(분양·임대) 20만호 물량 확보</li> <li>개요</li> <li>-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20만호 공급 :중앙정부의 청년·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기반으로 시·군 추진 사업까지 확대/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발표('22.10.)/이익공유형 등 저렴한 분양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 등 맞춤형 분양주택 제공/지역별·계층별 수</li> </ul>

			<p>요를 반영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제공/대상지는 공공택지를 비롯한 GTX 등 역세권 인근 중심으로 부지 확보</p>
		<p>62. 무주택자 대상 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마련</p>	<p>· 목표 : 무주택 수요자에게 입주할 주택을 사전에 배정하여 주거 안정 도모</p> <p>· 개요: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자 대상 신규 조성하는 사업지구 내 주택 예약 신청을 받아 소득과 자산구간에 따라 우선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청약제도 마련</p>
		<p>55.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추진</p>	<p>· 목표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취득세 세부담 완화 추진/법령개정 및 조례개정 등 합리적 세제개편 실행방안 마련</p> <p>· 개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면제)</p>
		<p>54. 부동산 관련 세제 합리적 개선</p>	<p>· 목표 : (재산세) 시도별 공시가격 상승률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별도의 공정가액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공제율을 50%까지 상향, 연령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각각 합산하여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p> <p>· 개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완화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선(공시가격 상승의 지역별 편차 반영,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장기</p>

			보유·거주한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방안 마련,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②공공택지 개발 사업의 개혁과 공공성 강화 - 공공택지의 장기임대주택 우선 공급 - 주택용지의 택지조성원가로 공급 - 공공택지개발 단계별 경기도 참여 및 경기도민 공급 확대	61. 3기 신도시,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자족도시로 건설		▶ 목표: 직주근접의 복합개발을 통한 탄소중립형 자족도시 조성 - 교통중심 자족용지 활성화 및 산업지원 기능 연계-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 자전거/PM 활성화 및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망 구축- 친환경·친에너지 인프라 구축, 충분한 공원·녹지 확보 등 탄소 저감기반 마련▶ 3기 신도시 내 대·중·소기업 유치 지원 - 기업투자 정보를 활용한 대·중·소 투자기업 발굴
	58.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 목표 :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신도시 재정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 개요 : 노후 신도시 재정비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령 제정 건의
③경기도 주택실신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역할 강화 -경기도 주택실신설 -경기주택도시공사 역할 강화	59. 노후 신도시 재정비 지원 전담조직 운영		▶ 목표 : 1기 신도시와 모든 노후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주거환경 개선 신속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규제 완화 및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63.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 특별공급 확대		▶ 목표: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제공 ▶ 개요: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분양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 지원 확대

핵심과제-경기도 혁신도정위원회 운영 및 협치체계구현) : 연대회의 핵심공약으로 제안한 과제 가운데 ‘가칭)경기도 혁신도정위원회 구성’은 경기도정 전분야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진전된 민관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를 실행할 추진체계로써 총괄전담조직 설치 및 협치시스템 구축을 포함해서다.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결정'은 물론, '정책집행 및 평가과정'을 민-관이 경험하게 되는 시기를 민선8기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혁신위의 성격을 '민선8기 공약을 전담하는 기구'로 하고 구성원은 '분야별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 기구인 '민관협치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민선 7기에서 활동했던 30명규모의 위원회를 10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2023-07-18)

따라서 연대회의가 요구했던 '경기도 도정혁신위원회'는 <도지사 공약을 점검하는 경기도 도정혁신위원회>, 정책제안그룹인 <민관협치위원회>로 이원화 되었음을 확인했다.

문제는 도정운영에 있어서 소위 '전문가' 위주의 역할배치 중용에 더해 도지사 본인이 이해하지 않고는 일을 풀어내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와 같이 이원화된 거버넌스 구조는 분절적이며 제한된 기능에 머물게 된다는 점이다.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와 도지사 공약점검 기구인 도정혁신위원회가 도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거버넌스 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위원회의 회의운영계획-집행-환류 등 실질적 협치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시민사회활성화 및 공익활동증진-사회혁신)** : 시민사회활성화 및 공익활동증진을 위한 ①관련 법적,제도적 정비 ②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강화와 시군으로의 확대 ③경기도민주시민교육의 강화 ④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한 지역재단 설립지원 ⑤사회적가치 추구형 비영리 일자리 육성 및 지원 등을 제시한 의제는 민선 8기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다. 인수위원회가 가동될 당시 소통과 협치위원회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군 확대 등이 부분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최종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공약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추가 설립(광명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가장 기초 단위인 시민사회의 역할강화는 사회 의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이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권리 옹호의 지지기반이며 국가와 시장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담당하게된다. 그만큼 정책적 리스크를 줄여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역동성을 담보해야 하며 지속가능성을 전망하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실행확산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윤석열정부의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해 저급한 인식의 수준으로 벌이고 있는 정책적 퇴행에 비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기도의 상황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평가가 쉽지않다.

경기도형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하여) 연대회의는 행정추진체계, 중간지원조직, 재원마련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사회혁신추진단 구성과 중간지원조직으로 사회혁신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요구했으나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이 포함된 공약으로 <271.옛 경기도청 부지에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 272. 사회적금융 전문기관 육성 및 사회투자기금 조성 273. 공공성 높은 분야를 사회혁신경제로 전략산업화가 반영되어 있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경기도 공약에서는 사회혁신정책을 사회적 경제와 연결하는데 있어 생태계조성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연대회의가 요구한 사회혁신 생태계조성을 위한 정책추진 로드맵 전체를 실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공약의 실효적 조치로써 사회혁신복합단지의 조속한 건설과 기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민선8기의 정책이 만나 어떻게 발전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경기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경기도형 혁신 주택정책 시행) 경기도의 도시정책, 특히 주택정책은 ‘혁신’할 수 있는가? 연대회의가 주장하는 바는 도민 주거안정실현의 토대는 현 주택정책으로 불가하다는 전제에 요구된 사항이다.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세대·계층·성별 등 중층적인 이해와 접근이 수반된, 지속가능한 삶을 전망할 수 있도록 통합된 계획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공공택지의 장기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민간건설사 공급 제한과 택지 내 주택용지의 택지조성원가 공급, 공공택지 계획·조성·주택 공급단계별 경기도 참여 및 경기도민 공급확대 등을 통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개혁과 공공성 강화가 결과로 나타나길 기대했다.

모니터링 결과 일부 정책공약에 포함된 것은 다음과 같다.

①장기임대주택 확충 ②토지임대부분양주택 도입 ③주거안정을 위한 시범사업 적극 추진으로 제안된 정책대안은 <53.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호 공급 62.무주택자 대상 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마련 55.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추진 54.부동산 관련 세제 합리적 개선 등이 정책으로 부분 반영>되었다. 특히 <53.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20만호 공급 계획>은 중앙정부의 청년·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기반으로 시·군 추진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방식에 있어서 이익공유형 등 저렴한 분양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 등 맞춤형 분양주택 제공, 공공임대주택 제공, GTX 등 역세권 인근 중심으로 부지 확보 등,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되었다고 평가한다. <61. 3기 신도시,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자족도시로 건설 58.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3기 신도시의 자족도시 건설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한 1기 신도시 지역의 재정비>를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공공택지 조성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공공택지에 대한 개혁의 핵심방향이 상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 주택실 신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역할 강화) 요구는 공약에 미반영되었다.  
 <59.노후 신도시 재정비 지원 전담조직 운영 63.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 특별공급 확대>계획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나 주택실 신설 등 경기도 주택관련 추진체계 강화나 경기도시공사의 역할 강화가 담보되지 못한 계획으로 평가한다.

내용에 있어서도 특정지역, 특정계층에 대한 수혜적 방식으로 한정 계획되었다는 점에서 연대회의와의 협약내용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공공택지 조성과정에서 경기도와 시군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택지 조성과정에서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택지개발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지않고는 이와 같이 한시적이고 소극적인 정책실행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판단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성 강화는 지방정부의 독립적인 도시조성 정책 성과를 축적해 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으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도를 할 수 있는 지지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과제로 가져가며 실행의지를 놓치않아야 한다

## 2) 인권도시로써 경기도&정책

연대회의 주요 의제		민선8기 공약반영 정책사업	
의제명	주요 내용	정책사업명	주요 내용
포괄적 차별금지에 관한 경기도의 적극적 조치 (인권)	① 포괄적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지역사회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대중 교육 실행 구체화	미반영	
	② 여성장애인 권리 보장지원 조례 마련	134. 장애여성 평생교육 자립생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 여성장애인의 정서안정, 사회성 향상, 역량강화 등 자립능력 향상</li> <li>▶ 개요 :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자조모임 등</li> </ul>
	③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 통보제 도입	미반영	
경기도 학대 대응기관 확대 및 학대 대응 부서통합 운영(인권)	① 학대대응기관 추가 설치 - 아동 영역 학대 보호	151.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 아동학대 사례 수, 아동 인구 수, 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한 설치 추진으로 31개 시·군을 포괄하는 밀도 높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li> <li>▶ 개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로 학</li> </ul>

<p>체계 강화를 위한 기관 설치 및 기능강화(경기도 아동권리보장원 설치·운영/아동권리기반 정책조정 체계 강화)</p>		<p>대 발생 이후 전문적·심층적 사례관리 지원을 통한 재발 예방 및 가정회복지원 강화/시·군별 특성을 고려한 설치·운영으로 경기도 전체 학대피해아동 대상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사례관리 추진하여 재발 방지 도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로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수 감소</li> <li>- 통합운영 시 관리 시·군 최대 2개로 제한하여 지리적 접근성 향상</li> </ul>
<p>② 노인영역 학대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대응 기관 추가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 추가 설치: 노인인구 비례 권역조정 통해 5개소=&gt;8개소 증설</li> <li>-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2개(경기남부, 경기동부) 추가 설치</li> </ul>		미반영
<p>③ 장애인 영역 학대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대응기관 추가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개 추가 설치(경기 동부, 서부)</li> <li>- 피해장애인(성인) 쉼터 2개(경기 동부, 서부)</li> <li>-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4개 권역별 2개(남,녀) 총 8개 설치</li> </ul>		미반영
<p>④ 경기도 학대대응부서 통합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1부지사 학대담</li> </ul>		미반영

	<p>당관 신설 독립적 운영</p> <p>- 학대담당관 내 학대 정책팀, 아동학대대응팀, 성인학대대응1팀(노인), 성인학대대응 2팀(장애인) 조직 구성 운영</p>		
<p>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 생활을 위한 권리 보장 (인권)</p>	<p>① 경기도 장애인 주거권 보장 및 지원주택 1만호 공급</p>	<p>125.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sup>2)</sup></p>	<p>▸ 목표 :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공간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설계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p> <p>▸ 개요 : 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 지원 확대 /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확대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p>
	<p>②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정착금 2,000만원</p>		
	<p>③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반영(월 240시간, 2년간 지원)</p>	<p>미반영</p>	
	<p>④장애인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p>	<p>미반영</p>	
	<p>⑤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 조례 전면 개정</p>	<p>미반영</p>	
<p>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인권)</p>	<p>①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p>	<p>52. 전기, 저상버스 확대<sup>3)</sup></p>	<p>▸ 목표 : 대용량 친환경 2층 전기·저상 보급으로 광역버스 입석 해소/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강화</p> <p>▸ 개요 : 2026년까지 도내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저상</p>

			버스 90대 도입 / 2026년까지 저상버스 5,840대 도입으로 일 반 시내 저상버스 80% 운행
①지자체가 (광역)이 동지원센터를 설치 하고 운영하도록 의 무화 시·도지사, 환승·연 계·접수·배차 등을 포괄하는 통합서비 스 체계 구축	74. 특별교통 수단 광역통합 시스템 구축으 로 장애인 이 동권 보장 <sup>4)</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 도-시·군 특별교통수단 시스템 연계 /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운행지역 확대 /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도입·운영</li> <li>▸ 개요 :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교통수단 광역통합시스템 구축·연계 및 이용자정보 공유</li> <li>-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 확대</li> <li>- 바우처·임차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운영</li> </ul> </li> </ul>
②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경기도 지원 서비스 질적 기준을 중앙정부에서 정하 여 운영사항 통합 지역마다 제각각인 요금, 운행시간, 거 리, 운행방식 등 특 별교통수단 운영 필 요사항을 경기도 조 례로 규정			
③ 전달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 위한 운영기관의 공공성 강화			
④ 특별교통수단 대 기수요 해소를 위하 여 바우처·임차 택시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누구에게나 필요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권정책이자 사회 안  
전망...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1대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

2)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2022.12.29.기준) 260p  
3)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2022.12.29.기준) 111p  
4)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2022.12.29.기준) 156p

(2020)'에 따르면 응답자 중 87.7%가 '성별·장애·인종·성적 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차별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에 88.5%가 찬성한다고 밝힌다. 한국사회의 다수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sup>5)</sup>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차별과 배제, 혐오의 정치'는 강력하여 여론과 상관없이 국회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지금이다. 이에 연대회의에서 차제에 지방정부의 역할강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선8기 공약에 전혀 보이지 않는 의제다. 어디에서도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치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처럼 미루게되는 것이다.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지원 조례 제정요구 또한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장애인권정책 확대 측면에서 여성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전문화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등 여성 장애인 폭력 피해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내용이었으나 민선8기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은 '자립'에 방점이 찍혀있다.

**경기도 학대 대응기관 확대 및 대응 부서통합) :** 학대의 문제는 아동 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겪고 있는 포괄적인 문제다. 2020년도 경기도 내 아동학대 신고접수 9,192건(전국 38,929건의 23.6%), 노인학대 신고접수 2,592건(전국 16,973건의 15.27%), 장애인 학대 신고건수 813건(전국 4,208건의 19.3%)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학대 발생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학대 대응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보건복지부, 2020년 영역별 학대현황보고서, 2021.) 하지만 민선8기 경기도정에서의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학대'를 멈추게 할 정책실행은 아동에 한정하거나 세대와 계층 등 고르게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 현재의 분절적인 지원체계 또는 협의조정기능 부재 등을 완화하기 위해 통합적인 대응 기구 및 체계를 요구하는 배경에 대해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 생활을 위한 권리 보장)** 경기도가 전국에서 장애인거주시설(미신고불법시설 포함)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것, 2016년 경기장차연의 투쟁이후 경기도는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500명의 자립을 약속하였으나 매년 자립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31개 시군을 통틀어 평균 1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 누적된 문제다.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공약 현황은 ①체험홈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프로그램 훈련 지원(22개 시군 67호 운영, 신규 설치 7채) ②자립생활주택 : 자립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2개 시군 5호 운영, 신규 설치 6채) ③누림하우스 : 경기도형자립생활주택시범사업 운영(3개 시군 4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립 희망 중

5) 한국여성단체연합(2022.02), '제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돌봄·연대·정의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젠더정책', 7P.

증장애인에게 자립 초기에 필요한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18개 시군 21명)이 지원되고 있다. 운영되고 있는 체험홈이나 자립생활주택, 자립지원주택, 누림하우스 등의 지역 분포를 확인해보았을 때 특정 지역에 한정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이라는 의미가 흐려지거나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는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구조로 비휠체어 장애인만 입주가 가능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황을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한데 취약한 정책공약 내용과 함께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또한 15백만원에서 20백만원으로 확대가 되긴 했으나 그 비율 또한 크지않다는 점에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반영(월 240시간, 2년간 지원)’ 제안은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로 시설에 거주하다가 자립생활을 시작한 당사자의 경우 지역사회에서의 삶에 익숙해지기까지 충분한 활동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부분이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탈시설을 고민하는 장애인들에게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반영된 월 130시간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제안 역시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경기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존재하며 매년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제보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거주시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의 경우 학대 사건이 일어나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시설이 운영됨에 따라 또다시 인권침해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시설폐쇄 행정명령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며, 행정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 폐쇄와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민선8기 도정에 반영,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현안이 터지면 수습하는 선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준이다. 중증장애인들이 시설 밖의 삶을 상상하거나 자립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이해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가 있는’... ‘자립 희망’... 또는 ‘중증장애인=집단수용시설’ 인식의 변화없음이 그대로 도정에 투영되고 있다 평가한다.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 경기도는 현재까지 광역이동지원센터 대부분이 특별교통수단과 이용자 사이의 중개 역할만 진행했으며 광역 간 환승, 연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6년 광역이동지원 연계 시스템이 설치되었으나 예산과 프로그램 호환의 이유로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도 제대로 된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지자체별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이 다른 문제점도 존재해왔다. 그에 더해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원이 부족하여 실제 24시간 운영되지 못한 부분, 그에 따라 사용인원이 밀집되는 시간대나 심야 시간에 배차 시간이 몇 시간 단위로 길어지는 문제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저상버스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부분은 존재하지만 도로 상황 등을 이유로 저상버스가 불가한 ‘예외 노선’이 인정되거나 저상버

스 공급 부족을 이유로 실제 저상버스가 도입되지 않는 노선이 높은 비율로 존재한다. 따라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현실적 운영 방안과 저상버스 예외 노선의 경우 어떠한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능한지 그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하여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해 조사위를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경기장차연과 경기도 교통국 간의 면담을 통하여 '23년 하반기에 지자체와의 협약과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에 대한 통합운영 표준지침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도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다 했으며 저상버스 예외 노선에 대하여 지속적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추가 진행점검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점이다.

### 3) '안전'에 관하여

연대회의 민선8기 주요 의제		민선8기 공약반영 정책사업	
의제명	주요 내용	정책사업명	주요내용
여성 폭력 과 혐오 없 는 사 회 실 현	①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사업 강화, 이를 위한 예산 확충	15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sup>6)</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li> <li>· 개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전문 심리치료 및 법률소송비용 지원</li> <li>- 경찰과 협업하여 안심지지 동반 서비스 지원 강화</li> </ul> </li> </ul>
	②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피해자 개별 공간 확충 등 보호시설 유형 다양화	153.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sup>7)</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 아동·청소년 성보호 센터 신설을 통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li> <li>· 개요 : 날로 증가하는 온라인 성범죄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발굴·구제·지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li> </ul>
	③ 성매매 집결지 폐쇄		미반영

	<p>및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담긴 조례개정</p>		
	<p>④ 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탈학교 여학생, 탈가정 여성 청소년에 대한 안전한 환경 마련과 임시 보호시설 확충</p>		미반영
경기도 여성 청년 1인 가구 지원 에 관 한 정책 사업	<p>① 젠더 폭력 피해 청년 여성 1인 가구 주거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마련</p>	<p>184. 경기청년 5대 권리장전 선포<sup>8)</sup></p>	<p>▸ 목표 : 5대 권리장전 비전 마련 및 정책적 뒷받침을 위한 경기도 청년정책 5개년(2023~2027년) 기본계획 수립 / 청년들의 안전권, 주거권, 교육권, 참정권, 일할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경기청년 5대 권리장전 선포</p> <p>▸ 개요 : 경기청년 5대 권리장전 실현으로 경기도 청년들의 안전권·주거권·교육권·참정권·일할 권리 등 보장</p>
	<p>② 각종 청년정책 지원사업에서의 성별영향 평가 반영</p>		미반영
	<p>③ 청년주거지원 정책 사업에서의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에 주안점을 둔 특수성 반영한 지원정책 사업 시행</p>	<p>232. 행복마을관리소 기능 확대<sup>9)</sup></p>	<p>- 목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맞춤형 공공서비스 확대</li> <li>▸ 행복마을관리소를 거점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 자치·복지 실현</li> </ul> <p>- 개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취약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li> <li>▸ 행복마을지킴이 및 사무원 채용을 통한 경과적 일자리 제공</li> </ul>
		<p>233. 여성</p>	<p>▸ 목표 :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p>

	1인가구 안심 패키지 보급 <sup>10)</sup>	<p>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및 여성안심 패키지를 보급하여 사회안전망 구축</p> <p>▸ 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26.(4년)</p> <p>- 사업량 : 10,000가구</p> <p>- 대상 : 도내 여성 1인가구</p> <p>- 주요내용 : 창문잠금 장치, 호신용 비상버튼 등 여성안심 패키지 보급</p>
	234.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제공	<p>- 목표:</p> <p>▸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제공을 통해 1인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p> <p>- 개요:</p> <p>▸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6년 12월 (단년도 계속사업)</p> <p>▸ 사업량 : ('23)5개소 → ('24)6개소 → ('25)7개소 → ('26)8개소</p> <p>▸ 지원내용</p> <p>- 지원대상 : 도내 1인가구(연령, 소득과 무관한 사실상 1인가구 포함)</p> <p>- 지원내용 : 경기도 1인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p> <p>- 이용요금 : 시간당 5,000원 (자부담) * 30분 초과 시 2,500원</p> <p>- 운영시간 : 평일 09 ~ 18시(탄력 운영 가능)</p>

**여성 폭력과 혐오 없는 사회실현):**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사업 강화, 이를 위한 예산 확충' 제안은 공약에 반영되어 센터가 추가로 조성되고 있으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피해자 개별 공간 확충 등 보호시설 유형 다양화'

- 6)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2022.12.29.기준) 320p  
7)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2022.12.29.기준) 316p  
8)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2022.12.29.기준) 378p  
9)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2022.12.29.기준) 474p  
10)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2022.12.29.기준) 476p

공약 제안은 부분 반영에 그쳤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젠더폭력의 가해자 대부분 사회적 관계 등이 망가지지 않은 채 일상이 유지되거나 하는데 비해 피해자는, 특히 가정폭력, 친족성폭력 등의 피해 여성은 정주공간을 벗어남과 동시에 모든 일상이 멈추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쉼터'는 장기든 단기든 최대한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구조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시설유형의 다양화를 요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민선 8기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센터 신설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젠더폭력 대응 양상을 정책사업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책협약 당시 여성폭력 대응의 강력한 의지에 비해 공약 후퇴다.

**경기도 여성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사업)** : 청년1인 가구 정책의 경우 '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청년'의 기본값에 '여성'을 포함할 시 남성과 다른 분명한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주소 라는 점에서 특화된 정책사업 발굴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여성청년1인가구'는 결혼을 하기 전 '임시 거처=임시적 삶'라는 편견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청년정책을 물성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배경이다. 그러는 동안 1인가구의 빈곤율 여성이 훨씬 높게 나타나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발표) 안전에 있어서 여성이 훨씬 불안해 하며 실제 강력범죄 피해 대부분 여성이며 주거불안정은 심화된다. 더는 여성청년1인가구 정책사업이 '청년모두'로 호명되어서는 안됨을 나타내는 내용이다.

따라서 청년 또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사업에서 성별영향평가가 반영되지 않는 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공약 제안된 '청년정책 지원사업에서의 성별영향평가'가 미반영된 부분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경기도는 성인지관점의 청년정책 접근과 젠더화된 사회적 인식의 틀에 균열을 낼만한 정책적 상상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다

#### 4) 돌봄 & 사회복지

연대회의 민선8기 주요 의제		민선8기 공약반영 정책사업	
의제명	주요 내용	정책사업명	주요내용
사회적돌봄의공성화와사회적노력(핵심과	① 취약계층 미디어 돌봄 지원사업	141. 경기 스마트 경로당 사업 확대	- 목표: >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강화로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회계프로그램 관리 등을 위한 지원인력을 중장년 등을

제)			<p>활용·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필요</p>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li> <li>▸ 사업규모 : 경기도 경로당 9,930개소</li> <li>▸ 사업량 : 서포터즈 운영(52명)</li> <li>▸ 사업내용 : 중장년 서포터즈를 경로당에 파견하여 디지털스마트기기 교육, 여가·건강 프로그램 제공 및 경로당 업무지원</li> </ul>
	② 경기도 여성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공공보육시설 확대	120.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p>-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연평균 170개소('22년~'26년 총 830개소) 확충에 따른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li> </ul>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축, 기존 관리동 민간·가정 어린이집 전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추진</li> <li>-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19.9.25.시행)</li> <li>- 민간·가정 어린이집 장기임차(5~10년)를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li> </ul>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경기도	127. 방과후 초등 돌봄시설 30% 확대	<p>-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등 돌봄시설 30% 확대</li> </ul>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공동주택,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방</li> </ul>

			<p>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와 학교가 협업하여 정규수업 외 시간에 빈 교실을 활용하여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돌봄터 설치 확대</li> </ul>
		128.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p>-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 내 거주하는 맞벌이·한부모·청소년 부모 가정 등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양육 공백 및 저출생 문제 해소</li> </ul>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맞벌이·한부모·청소년 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 이용권 월 20시간 제공</li> <li>중위소득 150%까지로 소득 기준 완화</li> </ul> </li> </ul>
		147. 아동 긴급돌봄센터 시·군 설치	<p>-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공적 돌봄체계 구축</li> <li>긴급돌봄이 필요한 시군에 긴급돌봄센터 설치로 돌봄서비스 제공</li> </ul>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의 야근, 양육자의 입원 등 긴급한 사정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시군에 긴급돌봄센터 설치</li> <li>기존에 설치된 아동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을 활용하여 시군 상황에 맞게 센터를 지정 운영</li> </ul>
		148. 시간연장 돌봄	<p>-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봐</li> </ul>

	서비스 운영 확대	<p>주는 돌봄시설 설치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함께돌봄센터에 시간연장 돌봄서비스 확대 설치 운영</li> <li>-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 연장 다함께돌봄센터 시군 설치 확대</li> <li>- 시간연장형 돌봄으로 기존 초등돌봄서비스의 틈새를 효율적으로 보완하는 돌봄서비스 제공</li> </ul> </li> </ul>
	149. 지역거점 아동돌봄센터 설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형 시군 아동돌봄센터 확대 설치로 지역별 돌봄수요 및 다양한 초등돌봄기관 간 통합·조정을 통한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li> </ul> </li> <li>-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거점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시군 확대 설치</li> <li>- 지역별 돌봄수요 및 다양한 초등돌봄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거점형 시군 아동돌봄센터 확대 설치</li> </ul> </li> </ul>
	<일부반영> 166.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 조성</li> </ul> </li> <li>-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단년도(1~12월) 반복사업</li> <li>▸ 사업량 : 120개소(매년 24개소)</li> <li>▸ 사업내용 : 어린이, 전문가가 참여하는 어린이놀이터 조성·리모델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대상지 :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도시공원 내 놀이터 등</li> </ul>
		<p>어르신 주치의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li> <li>▸ 노인 대상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건강 격차 해소</li> <li>- 개요:</li> <li>▸ 노인 대상 주치의 왕진 서비스, 방문간호, AI·IoT 기반 건강관리 등 통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li> <li>▸ 사업 모델 개발 후 시범사업 추진</li> <li>-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단기 과제 의뢰 → 경기도 공공보건 의료지원단</li> </ul>
		<p>돌봄매니저 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li> <li>▸ 노인 돌봄매니저 도입 및 추진으로 통합적 노인돌봄 체계 구축</li> <li>- 노인의 다양한 돌봄욕구에 맞는 통합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형 공공 돌봄서비스 기관을 육성</li> <li>- 기관내 돌봄매니저를 통한 1:1 맞춤형 서비스 연계</li> <li>- 개요:</li> <li>▸ 정기적인 사례관리로 노인들의 상태 수시 파악</li> <li>▸ 안전지원·영양관리·일상생활 지원·운동서비스 외 주거개선·보건의료연계지원 등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연계</li> <li>▸ 종합 상담창구로서 돌봄·노인 복지 서비스 원스톱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기관 협력체계 및 지역 안전망 구축</li> </ul>
--	--	--	--

**돌봄사회 실현의 측면에서 돌봄의 공공성강화):** 오래동안 누적된 사회적 의제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며 맞닥뜨린 건강권과 재난불평등은 '각자도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재 인식케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응전략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연대회의와 정책협약한 내용보다 진전된 정책으로 반영된 부분도 발견된다.

<120.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127. 방과후 초등돌봄시설 30% 확대, 128.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147. 아동 긴급돌봄센터 시군 설치, 148. 시간연장 돌봄서비스 운영 확대, 149. 지역거점 아동 돌봄센터 설치, 166.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경기시민사회에서 요구했던 '경기도 여성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공공 보육시설 확대'와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경기도' 사업에 일부 반영되었다.

'도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는 기존 민간시장으로부터의 저항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점에서 경기도의 추진의지를 점검해볼 수 있는 사업이다. 기존 민간어린이집 전환을 유도하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규모의 경우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등이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방과후 초등돌봄의 경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등 돌봄시설 30% 확대와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맞벌이·한부모·청소년 부모 가정 등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부모의 야근, 양육자의 입원 등 긴급한 사정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시군에 긴급돌봄 지원, 시간연장돌봄 등 비교적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약계층 미디어 돌보미 지원사업(그러나 경로당 중심에서 확장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여성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공공 보육시설 확대 등도 내용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1인 고립가구 종합대책 수립') :** 연대회의에서 요구한 '1인 고립가구 종합대책 수립'은 <232. 행복마을관리소 기능확대, 233.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 234.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제공, 129. 어르신 주치의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136. 돌봄매니저 제도 도입>에 반영 시행하고 있었다. 232. 행복마을관리소 기능확대는 1인가구, 고령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특색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화하겠다는 내용으로, 1인가구 요구도에 따른 사업화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1인 가구가 '노인'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대상 확대 등 추가 진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 5) 문화

연대회의 민선8기 주요 의제	민선8기 공약반영 정책사업
-----------------	----------------

의제명	주요 내용	정책사업명	주요내용
문화협치 플랫폼 '경기도문화자치위원회구축'	① 문화정책인, 기획자, 예술인, 주민, 문화행정의 결합으로 문화협치플랫폼 구축 ② 5년마다 계획하는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및 집행대책 마련, 모니터링 ③ 경기도 주요 문화정책 및 사업 평가 ④ 새로운 문화정책 및 사업 수립		구축 완료
예술인 기본소득	①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조례' 제정 ② 경기도문화예산 3% 확보	92.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	▶ 목표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활동을 하지만, 시장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에 대해 일정한 소득 보전 제도 도입 - 예술인들의 건강한 창작활동 기회를 도모하여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예술 생태계 조성  ▶ 개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예술활동증명유효 예술인에 대해 기회소득 지원 경기도의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내년 본예산 최종 심의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 예산안 5,079억원에서 546억원이 증액된 5,625억원으로 증액하여 최종 의결함.
문화예산 3% 확보			이로써 도 일반회계 세출 편성액 29조 9,265억원 대비 1.7% 수준이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이 최종 의결액(도 일반회계 29조 9,770억원) 대비 1.88%로 약 0.18%p 상향됨

## 6) 기후위기

연대회의	민선8기 공약반영 정책사업
------	----------------

민선8기 주요 의제				
의제명	주요 내용	정책사업명	주요내용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전환 정책 (핵심과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2025년까지 최소 25%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	257.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 및 기후대응기금 설치 <sup>1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기후대응기금 조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li> <li>▶ 개요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을 이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관련 조례 정비 추진/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녹색금융기반 마련 기금 조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과 그 과정에서의 피해 사각지대 예방</li> </ul>	
	탄소중립 실행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을 만든다. (현재 기금 대비 최소 10% 정도의 예산을 기후대응기금에 투입)		258. 경기도형 탄소중립학교 운영 <sup>12)</sup> (기후에너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 도내 학교, 지역사회 대상 기후변화교육을 위한 '기후변화를 위한' 기후변화교육 전문강사' 양성/도내 초.중.고 대상 탄소중립 시범학교 선발 및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li> <li>▶ 개요 : 경기도형 탄소중립 시범학교 운영/ 강사진 양성, 커리큘럼 개발/ 탄소중립 시범학교 종학교육 프로그램 운영</li> </ul>
	사회환경교육 예산을 1인당 1만원을 확보			
정책결정자(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와 공무원, 경기도 소속 위원회 위원,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환경교육 필수 이수제도 마련	경기도 2025년까지 에너지 수요 관리, 효율 개선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를 최소 10% 절감, 재	248.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 <sup>13)</sup> (기후에너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 재생에너지 3030추진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li> <li>▶ 개요 : 재생에너지 보급</li> </ul>	

	<p>생에너지 발전비중을 10% 상향</p> <p>경기도 1가구 1발전소 지원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체 가구수의 10%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p> <p>‘재생에너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치 - 사용 - 수리 - 폐기까지 전과정 지원체계 마련</p>		<p>확대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우리집 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 원스톱 통합센터 설치로 규제 혁신 및 민간투자 확산을 위한 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p>
	<p>- 신축 공공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의무화</p> <p>시군별 ‘건물 에너지 진단사’ 양성</p> <p>노후된 건물의 에너지 성능진단</p>	<p>269.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조성<sup>14)</sup> (건축디자인과)</p>	<p>▸ 목표 : 도, 시,군의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및 신축건물 제로에너지건축 조성 등을 통한 저탄소건축물 확대 및 민간건축 자발적 참여 유도</p> <p>▸ 개요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기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연차별 추진 (국. 공립어린이집, 보건소, 공공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도에서 신축하는 연면적 3천㎡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인증 4등급 의무화</p>
	<p>자동차 도로와 주차 공간 면적을 확대하는 예산을 녹색전환 교통 예산으로 전환 (복합수단 거리 확보)</p> <p>경기도 순환버스 이동망 확충</p>	<p>251. 경기도형 녹색 교통 인프라 구축<sup>15)</sup> (미세먼지 대책과)</p>	<p>▸ 정책목표 : 내 집 앞에서도 손쉽게 충전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 인프라 조성/ 대중교통 이용체계 강화 및 친환경 교통 서비스 확대를 통한 경기도형 녹색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탄소중립 성과 제고</p>

	자전도로 확충하여 경기도 자전거 교통 수단분담률 2025년 까지 5% 높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요 : 교통비 지원사업 실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li> </ul>
	- 폐기물의 양 자체를 줄이고 경기도 내 시군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시군에서 우선 처리 건설폐기물 대책 마련하여 발생량을 줄이고 순환이용률을 늘린다	259. 자원순환마을 시즌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 지역별 최적화된 자원순환 실천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li> <li>개요 : 기존 '자원순환마을 만들기'사업을 시즌2로 확대</li> <li>사업기간 : 2023. 1~12월 (단년도 계속)</li> <li>사업규모 : 총 55개 이상 자원순환마을 조성</li> <li>지원범위 : 공동체별 사업비 신청예산 공모. 선정 후 지원(상한선 존재)</li> </ul>
	- <정의로운 전환> '녹색금융'지원 기구를 통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자금을 공급 <기후일자리> 경기도 생산인구수 대비 최소 5% 기후일자리 종사	249.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확대 <sup>16)</sup> (산업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목표 : 산업단지의 탄소중립화를 통한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탄소저감 실현)/ 정부정책과 연계 "경기도형 스마트 그린산단" 확대 추진</li> <li>개요 : (탄소중립 산단) 기후 위기로 촉발된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도내 산업단지의 탈탄소 전환과 에너지 자립에 선제적으로 대응/ (스마트 그린산단) 도내 노후산단의 '제조혁신+친환경 경제'전환을 유도하고 에너지효율 향상 및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li> </ul>
탄소 중립을 위	쓰레기는 '자원&에너지'통합정책 추진	260. 자원순환 기반 조성 과 신사업 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 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재활</li> </ul>

한 폐기물 자원순환 에너지화 정책		출17) (자원순환과)	용시설 확충 재활용 제품 개발 등 기술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 및 기술지원  ▶ 개요 : 폐기물 소각. 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을 완전 순환이용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자원순환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재활용 인프라 확충/ 자원순환 산업 육성을 통한 재활용 기술 고도화
		259. 자원순환마을 시즌 2 <sup>18)</sup>	▶ 목표: 지역별 최적화된 자원순환 실천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 개요 : 기존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즌2로 확대 -사업기간 : 2023.1~12월(단년도 계속) -사업규모 : 총 55개 이상 자원순환마을 조성 -지원범위 : 공동체별 사업비 신청예산 공모. 선정 후 지원(상한선 존재)
	탄소중립자원순환 전담부서 설치		미반영
	탄소중립자원순환 시범사업 추진		미반영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경제 구조 개편 녹색금융 활성화 재생에너지 설치 용 자금 이자 차액 지원제도 경기형 FIT 제도 도	247. 탄소중립 펀드 조성을 통한 녹색유망기업 발굴. 육성 <sup>19)</sup> (지역금융과)	▶ 목표 : 친환경, 저탄소 분야 기업 발굴. 투자를 통한 경기도형 녹색금융 실천 및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육성  ▶ 개요 : 친환경, 저탄소 분야 기업 발굴. 투자로 경기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육

	입		<p>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 펀드 조성 및 운용(투자)을 통한 녹색유망기업 발굴. 육성</li> <li>- 도내 탄소중립 분야(그린 뉴딜,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기업 등</li> <li>-경기도(총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운용관리)-운용사(발굴.투자)</li> </ul>
	<p>시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시설 확대 경기도 내 공공부지에 도민 참여형 태양광 설치 지역, 학교, 아파트 단위 공동체 태양광 시설 설치 지원 베란다 태양광, 주택 태양광 지원 예산 확대 시민참여 햇빛발전 협동조합 양성</p>	<p>255.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 지원 (기후에너지정책과)<sup>20)</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 개발이익 공유를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와 에너지연금 실현을 위해 마을 단위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지원/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으로 에너지 불평등 해소 및 에너지복지 실현</li> <li>▶ 개요 : 공공용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를 통해 주민 수용성 제고 및 에너지연금 실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부지발굴과 투자비용 확보를 통한 주민참여 사업 확대/ 농촌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를 통한 에너지 불평등 해소 및 이익 공유</li> </ul>

- 11)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523쪽
- 12)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525쪽
- 13)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505쪽
- 14)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547쪽
- 15)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511쪽
- 16)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507쪽
- 17)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529쪽
- 18)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527쪽
- 19)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503쪽
- 20)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519쪽

지난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었고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sup>21)</sup>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을 목표치로 설정했다. 따라서 경기도 민선 8기 임기 내(2025년) 온실가스 25%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33.5백만 톤으로 국가 배출량의 약 19.2%<sup>22)</sup>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12년간 (2005년~2016년) 연평균 3.5% 증가로 같은 기간 전국평균 2% 보다 빠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계속되는 신도시 건설과 인구 유입으로 인해 증가속도와 배출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경기도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2022년 7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중이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sup>23)</sup> 일정부분 탄소중립 녹색전환 정책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와는 별도로 경기도는 지난 5월 경기RE100 선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유희부지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일련의 정책실행 사례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 실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연대회의에서는 향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연대회의가 제시한 <탄소중립자원순환 전담부서 설치>는 경기도정의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며, 경기도 각 부서의 사업에 탄소중립 정책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57. 탄소중립 정책 결정 및 실행기구 마련 운영>에 일부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추진체계에 있어서는 <환경국 → 기후환경에너지국> 명칭이 변경되고, <환경정책과 → 기후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정책과 → 에너지산업과>로 변화가 있음도 확인했다.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기후환경정책과가 신설되었으나 일부 업무분장을 재정리한 수준으로, 기존 조직과 변별력이 있어보이지 않는다. 경기도 탄소중립자원순환 전담부서로 경기도정의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내용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21)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2)한국환경공단 2018년 자료

23)2023. 3. 28 [보도자료] 김동연 “기후변화가 인류위협, 기후도지사가 돼 대응에 앞장서겠다.”

2023. 4. 24 [보도자료] 김동연, “기후위기에 정면으로 부딪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선도자 될 것”

또한 <탄소흡수력 높은 산림 조성><sup>24)</sup>사업은 기존의 '숲가꾸기'와 '조림 산업'에 '탄소'가 포함된 수준이다. 현재 수준에서의 정책실행력이라면 탄소흡수원 총량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수정된 정책사업이 나와야 한다.

## 2. 정책협약 의제, 민선8기 정책공약 사업 예산 반영 규모&추진계획

	정책사업명	전담부서	예산규모	추진계획 및 일정
1	220. 경기도 도정혁신위원 회 설치	비전전략 담당관	비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도정혁신위원회 구성 및 위촉식 추진</li> <li>2022년 4분기 위원회 설치 및 민선8기 임기 동안 운영</li> </ul>
2	271. 옛 경기도청 부지,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	사회적 경제과	56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 : 사회투자기금(투자펀드) 조성 및 투자조합 운영</li> <li>사회적경제기금 + 민간투자금 방식 사회투자조합 조성</li> <li>기금 자금 조성 추진(대기업 ESG 자금 등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li> <li>중개기관 육성 액셀러레이팅(사회적경제원 내 전담부서 신설)</li> <li>사회적금융 활용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회투자펀드 운용기관 육성 : 선정시 도내 지점 설립 조건 부여 등</li> </ul> <p>추진일정 :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계획 확정(2022년 4분기) =&gt; 행안부 타당성 조사,건축기획 등(2023년 1분기-4분기) =&gt; 설계 및 공사(완공 순차별 입주)(2023년 3기-2025년 4분기)=&gt;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 완료(2026년 1분기)</p>
3	272. 사회적금융 전문기관 육성 및 사회투자기금	사회적 경제과	21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 : 사회투자기금(투자펀드) 조성 및 투자조합 운영</li> <li>사회적경제기금 + 민간투자금 방식 사회투자조합 조성</li> <li>기금 자금 조성 추진 : 대기업 ESG 자금 등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li> </ul>

24)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525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개기관 육성 액셀러레이팅(사회적경제원 내 전담부서 신설)</li> <li>- 사회적금융 활용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회투자펀드 운용기관 육성 : 선정시 도내 지점 설립 조건 부여 등</li> <li>▶ 추진일정 : 사회적금융 전문기관 육성 사회투자기금 출연(2023년 1분기)</li> </ul>
4	273. 공공성 높은 분야,사회혁신 경제로 전략산업화	사회적 경제과	826.74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기능 활성화</li> <li>- 사회적경제원 신설(2023.1. 개원 목표)</li> <li>- 사회혁신경제 민관합동 전략기획 그룹을 통한 기능 활성화 추진(사회적경제 협동자산화 특별유자 추진)</li> <li>- 공공성 높은 분야의 혁신·공유·협업모델에 기초한 자산(시설·장비) 매입자금 특별유자</li> <li>▶ 추진일정 : 사회적경제원 설립(2022 1분기-2023년 1분기)=&gt;사회혁신경제 기능 활성화(2022년 4분기-2026년 4분기)=&gt;협동자산화 특별유자 추진(2022년 4분기-2026년 4분기)</li> </ul>
5	134. 장애여성 평생교육 및 자립생활 지원 확대	장애인 복지과	11.6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 여성장애인 사회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2022년) / 교육프로그램·특화 프로그램 신규개발 및 운영, 참여자수 확대(2023년~)</li> <li>▶ 일정 : 여성장애인 사회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2022년 3.4분기/중증장애인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자수 확대 : 2023년~2026년</li> </ul>
6	154. 젠더정책협력 기반강화	여성 정책과	1.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시군 성평등정책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젠더전문관 배치 지원</li> <li>- 젠더정책 협력기반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교육 지원</li> <li>- 시군 젠더전문관 배치 현황 관리</li> </ul>

7	151. 아동보호전문 기관 설치 확대	아동 돌봄과	5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적정 규모까지 확충 추진 * 현 19개소 → 28개소(9↑)</li> <li>- 안산, 수원 등 아동학대 발생을 높은 시·군은 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확대</li> <li>-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확대(2022 3,4분기-2026 1,2분기)</li> </ul>
8	125.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sup>25)</sup>	장애인 자립지원 과	26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속 지원</li> <li>- 체험홈, 자립생활주택·누림하우스 (76호→109호, 목표 33호 설치)</li> <li>※ 2024년부터 누림하우스·자립생활주택은 누림하우스로 통합 운영 예정</li> <li>-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정착 지원 :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확대(22년) 15백만원 → (24년~) 20백만원 / 전담 인력(코디네이터) 배치 (장애인 2명당 1명)</li> <li>▸ 일정 : 체험홈·자립생활주택 등 지원</li> <li>- 22년 1분기 ~ 26년 4분기</li> <li>-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22년 1분기 ~ 26년 4분기</li> </ul>
9	52. 전기, 저상버스 확대 <sup>26)</sup>	버스 정책과, 공공버스 과	4,337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연도별 2층 전기·저상버스 도입</li> <li>- ('22년 현재) 18대→('23년) 18대→('24년) 18대→('25년) 18대→('26년) 18대</li> <li>- 연도별 일반 시내 저상버스 도입 : ('22년 현재) 900대→('23년) 1,540대→('24년) 1,200대→('25년) 1,100대→('26년) 1,100대</li> <li>▸ 일정 : 2층 전기버스 도입 수요 및 타당성 검토 : 매년 3~4분기</li> <li>- 전기충전소 설치 지원, 2층 전기버스</li> </ul>

				노선 투입 및 홍보(22년 3분기~26년 4분기)/저상버스 도입(22년 3분기~26년 4분기)
10	74. 특별교통수단 광역통합시스 템 구축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sup>27)</sup>	도로 안전과	6,298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 도-시·군 시스템 연계 및 수도권 운행지역 확대(31개 시·군)</li> <li>-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도입·운영 지역 확대</li> <li>▸ 일정 : 시스템 연계 및 수도권 운행지역 확대 바우처택시 도입·운영 (22년 3분기 ~ 26년 2분기)</li> </ul>
11	15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sup>28)</sup>	여성 정책과	9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개소</li> <li>- 공약 이행을 위한 인력 확보, 관계기관 논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li> <li>▸ 일정 : 치유 프로그램 공간 조성(23년 1~3분기)/프로그램 운영(23년 4분기 ~ 26년 4분기)/전문심리치료, 법률소송 비용 지원계획 수립(23년 1~3분기)/비용 지원(23년 4분기 ~ 26년 4분기)</li> <li>- 경찰 연계 안심지지 동반서비스 : 협업기관 논의(23년 1~3분기)/서비스 지원(23년 4분기 ~ 26년 4분기)</li> </ul>
12	153.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sup>29)</sup>	여성 정책과	18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아동·청소년 성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li> <li>-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착취 피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성착취 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지원대상 확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li> <li>- 예방, 긴급구조, 피해자 맞춤형지원서비스, 유관기관 연계 기능 강화한 총괄센터 설치·운영</li> <li>▸ 일정</li> <li>- 아동·청소년 성보호 조례 제정(23년</li> </ul>

				1~2분기) -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23년 1~2분기) -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23년 1~2분기) - 아동·청소년 성보호센터 운영(24년 1분기 ~ 26년 4분기)
13	184. 경기청년 5대 권리장전 선포 <sup>30)</sup>	청년복지 정책과	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경기청년 5대 권리장전 선포</li> <li>▸ 일정 :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22년 2분기 ~ 23년 1분기)/경기청년 5대 권리장전 선포(23년 2분기)</li> </ul>
14	232. 행복마을관리 소 기능 확대 <sup>31)</sup>	자치 행정과	18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1인 가구, 고령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특색사업 발굴 및 사업 내실화</li> <li>- 지역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li> <li>- 행복마을관리소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li> <li>▸ 일정 : 특색사업 발굴 및 사업 내실화(22년 1분기 ~ 26년 4분기) / 관리소-자치경찰 간의 협력체계 구축(22년 1분기 ~ 26년 4분기)/ 행복마을관리소 평가시스템 도입(23년 1~4분기)</li> </ul>
15	233.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 <sup>32)</sup>	여성비전 센터	29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기초자료로 시·군별 사업량 확정 후 사업 추진</li> <li>- 1인가구 노출 방지를 위한 온라인 신청접수(예)경기민원24) 및 택배 발송</li> <li>▸ 일정 : 여성안심 패키지 보급(23년 1분기 ~ 26년 4분기)</li> </ul>
16	120. 국공립어린이 집 확대	보육 정책과	1,80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 국비 계속사업</li> <li>-농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신축</li> <li>-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매입</li> <li>-자가소유민간어린이집(18-)자가소유가정어린이집(20-)농어촌 민간어린이집(21-) 장기임차</li> </ul>

				- 도비 신규사업 :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 전환 지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 민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지원)/ 신축 지원(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지역 간 불균형 및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국공립 「설치비율 + 이용률 + 정원충족률」기준 선정 및 신축비 우선 지원·개원준비금 지원) / 인건비 등 신규 설치 어린이집 개원 준비업무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17	127. 방과후초등돌봄	아동돌봄과	1,123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 다함께돌봄센터 2026년까지 262개소로 확대(74개소 증)</li> <li>- 학교돌봄터 2026년까지 31개 교실로 확대(9개 교실 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함께돌봄센터 확대(2022-2026)</li> <li>- 학교돌봄터 확대(2022-2026)</li> </ul> </li> </ul>
18	128. 아이돌봄서비스확대	아동돌봄과	212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시·군 사업 수요조사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시군수요조사(2022) /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사업계획수립 등(2023) / 맞벌이, 한부모, 청소년부모가정 등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시행(2024-2026)</li> </ul>
19	147. 아동 긴급돌봄센터 시·군 설치	아동돌봄과	26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 2026년까지 긴급돌봄센터 필요 시군에 센터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 연구의뢰 및 사전조사(2023) / 사전계획수립 및 사회보장제도 협의(2024) / 긴급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연차적확대)(2024-2026)</li> </ul>
20	148. 시간연장 돌봄서비스 운영 대	아동돌봄과	23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 기존 다함께돌봄센터에 시간연장 돌봄서비스 확대 운영 (2022-202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 다함께돌봄센터 시간연장 (2022-2026)</li> </ul>

21	141. 경기 스마트 경로당 사업 확대	노인복지 과	44.29억원	<p>▶ 계획 : : 경기도 경로당 스마트화 추진 - 디지털 프로그램(스마트폰·어플·스마트 뱅킹), 키오스크 등 스마트 활용 교육(주 3일과정) 및 보조금 회계관리프로그램 관리, 건강·문화활성 화지원 - 디지털 활용 교육(3일 과정) 실시 경 로당</p> <p>▶ 일정 : 서포터즈 모집 및 양성교육 : 2023년1분기, 2024년 1분기, 2025년 1 분기, 2026년 1분기 -서포터즈 활동 : 2023년2분기~4분기/ 2024년2분기~4분기/2025년2분기~4분기 /2026년2분기~4분기</p>
22	166.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공원녹지 과	288억	<p>▶ 계획 : 어린이가 참여하는 경기아이누 리놀이터 조성/경기아이누리놀이터 자문 단(민간전문가) 운영</p> <p>▶ 일정 :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2022년 ~ 2026년)/경기아이누리놀이터 자문단 운영(2022년 ~ 2026년)</p>
23	234.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 스 제공	가족 다문화과	52억	<p>▶ 계획 :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세부계획 수립 및 매뉴얼 작성·배포 - '23년 5개 시군 사업추진 후 연도별 참여 시군 확대</p> <p>▶ 일정 :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추진(2022년 3분기 ~ 2026년)</p>
24	129. 어르신 주치의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건강증진 과	미정	<p>▶ 계획 :보건, 의료 분야 전문가 자문회 의 개최 및 의견수렴 과정을 후 사업모 델 개발</p> <p>▶ 일정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022년 4분기 ~ 2023년 1분기)/사업모델 개발 (2023년 2분기 ~ 4분기)/시범사업 시행 (2024년 ~ 2026년)</p>

25	136. 돌봄매니저 제도 도입	노인복지 과	12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 :노인 돌봄매니저 도입 및 시범 사업 추진(2023년)/시범사업 평가 및 사업 확산(2024년~)</li> <li>일정 : 돌봄매니저 시범사업 추진 (2023년)/시범사업 평가 및 사업 확산(2024년 ~ 2026년)</li> </ul>
26	92.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	예술정책 과	777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 : 정책 방향 공론화를 위한 예술인 및 전문가 등 관계자 토론회 개최/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 정책연구용역 실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실시</li> </ul>
27	247. 탄소중립 펀드 조성을 통한 녹색유망기업 발굴. 육성 (지역금융과)	지역금융 과	1,200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 탄소중립펀드 조성 및 녹색유망기업 발굴. 육성(2022~2034년)/5년간 1,200억 원 규모 이상 탄소중립펀드 조성/녹색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 육성 지속 추진(펀드결성 후)</li> <li>일정 :탄소중립펀드 조성(2022년, 2024년, 2026년 격년단위 조성)/투자 기업 발굴 및 투자실시 (2022년 3/4분기~2026년)</li> </ul>
28	248.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 (기후에너지정 책과)	기후 에너지 정책과	3,683억 원 (~202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 전력자립 10만 가구(3Kw), 미니태양광보급(800w)등 우리집 태양광 설치 지원/재생에너지 원스톱 통합센터(투자중개소 포함) 설치 및 자원지도 구축/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공공용지 햇빛발전소 등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생산</li> <li>일정 : 전력자립 10만 가구, 미니태양광 보급(2022년 ~2026년)/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생산(2022년~2026년)/원스톱 통합센터 설치, 자원지도 구축 (2022년 4/4분기~2026년)</li> </ul>
29	249. 탄소중립	산업정책 과	317억 원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 탄소저감을 위한 탄소중립 시범산단 조성(~'25)/탄소중립 산단 조성 확</li> </ul>

	산업단지 조성확대 <sup>33)</sup>			<p>대를 위한 탄소중립. RE100 산업단지 모델 수립 추진(~'23)/도내 일반산단 대상으로 “스마트 그린산단” 4개 추가신청('23~'26년, 매년 1개소)/산업단지 탄소중립을 위해 관계 법령 등 제도개선</p> <p>▸ 일정 : 탄소중립 신규 시범산단 조성(~2026년 6월)/탄소중립 기존 시범산단 조성( ~2025년)/탄소중립. RE100 산업단지 모델 수립(2023년)/스마트 그린산단 확대(2023년~2026년)</p>
30	251. 경기도형 녹색교통 인프라 구축(미세먼지 대책과)	버스정책과/미세먼지대책과/도로안전과	3,039억원	<p>▸ 계획: 도민 버스 교통비 지원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선 8기 임기내 전기차 충전기 85,000(누적)기 설치</li> <li>- 관광지 및 주요거점을 잇는 자전거도로망 구축(정비)</li> </ul> <p>▸ 일정 :도민 버스 교통비 지원 (2022년 3/4분기~2026년)/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2022년~2026년)/자전거도로망 구축 (2025년~2026년)</p>
31	255.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 지원 (기후에너지정책과)	기후에너지정책과	728억원	<p>▸ 계획: 공공용지 부지발굴 컨설팅, 발전사업자 선정 및 시설 건립 추진/에너지자립. 기회소득 마을 선정 및 사업비 지원</p> <p>▸ 일정 : 신재생에너지 발전 가능 공공용지 발굴 및 민간자본유치(2023년~2026년)/에너지자립. 기회소득 마을 선정 및 사업비 지원(2023년~2026년)</p>
32	257. 탄소중립 추진 구축 및 기후대응기금 설치 <sup>34)</sup>	기후에너지과	1,200억원	<p>▸ 계획: 주체별 탄소중립 정책 결정 및 실행 기구 마련. 운영/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확대 개편/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조성(안)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정 :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구성 (~2023년 4분기)/경기도 탄소중립 협의체 구성(~2023년 4분기)/기후대응기금 조성(안) 도출(~2022년 4분기)/기후대응기금 조성 (~2022년 4분기)</li> </ul>
33	258. 경기도형 탄소중립학교 운영	기후에너지정책과	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 기후변화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연 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중립 시범학교 교육, 지역사회 기후변화교육 등 강사 인력풀로 활용</li> <li>탄소중립 시범학교 대상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li> <li>기후변화 교과서 보급, 기후변화교육, 생활실천캠페인 등 종합프로그램 운영</li> <li>탄소중립 추진 도 교육청, 학교 교직원 대상 기후변화교육 실시</li> </ul> </li> <li>일정 : 기후변화교육 전문강사 양성 (2023년~2026년)/ 탄소중립 시범학교 운영 (2023년~2026년)</li> </ul>
34	259. 자원순환마을 시즌 2	자원순환과	2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 ('22년) 시즌2 사업계획 시. 군 담당자 설명회('23년 본예산 확정 후)/('23년) 시즌2 사업 실시(10개 마을 선정. 추진)/ ('24년) 수탁기관 선정 및 사업 지속 추진(15개 마을 선정. 추진)/('25년) 시즌2 사업 지속 실시(18개 마을 선정. 추진)</li> <li>일정 : 시즌2 사업 시.군 설명회('22년 4분기)/다음 연도 사업 시.군 설명회('23,'24,'25, '26년 매년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수탁기관 공모 ('23년 4/4분기~'24년 1/4분기)</li> <li>시즌2 사업 추진 (23년~26년)</li> </ul> </li> </ul>
35	260. 자원순환 기반조성과 신사업 창출	자원순환과	1,26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 (생활자원회수센터) 8개소, 808톤/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년) 29개소 1,449톤/일 →'26년) 37개소, 2,257톤/일(신설2, 대체신설5, 증설1)</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업체) 자원순환 스타트업 기업 등 38개 업체 지원(~'26년)</li> <li>-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기업</li> <li>- (수행기관) 환경. 에너지 전문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업무 수행</li> </ul> <p>▶ 일정 :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2022년~2026년)/재활용업체 사업화 자금 및 기술지원 (2022년 4/4분기~2026년)</p>
36	269.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조성	건축디자인과	870억원	<p>▶ 계획: 도, 시군의 기존 공공건축물 300개소 그린리모델링 연차별 추진/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 기술 도입 지원조례지원('23년 1월)</p> <p>▶ 일정 : 기존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22년3/4분기~2026년)/신축건축물 제로에너지화 (2023년~2026년)</p>

옛 경기도청 부지에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투입 예산은 561억원으로 확인되었다. 재원확보는 사회투자기금(투자펀드) 조성 및 투자조합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연결하여, 사회적금융 전문기관 육성 및 사회투자기금 조성액 또한 펀드조성이 우선이며 규모는 210억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기금조성계획이 대기업 ESG 자금 등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게 되는데 현 경제적 상황이 연동된다는 점에서 만만찮은 조성액이자 투자액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설명해 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촘촘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공공성 높은 분야를 사회혁신경제로 전략산업화하는데 있어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기능 활성화는 옳은 방향이라는 평가다. 830여억원의 소요예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성 높은 분야의 혁신·공유·협업모델이 반드시 사례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

- 25)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2022.12.29.기준) 260p
- 26)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2022.12.29.기준) 111p
- 27)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2022.12.29.기준) 156p
- 28)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2022.12.29.기준) 320p
- 29)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2022.12.29.기준) 316p
- 30)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2022.12.29.기준) 378p
- 31)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2022.12.29.기준) 474p
- 32)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2022.12.29.기준) 476p
- 33) 경기도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 507쪽
- 34) 경기도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 523쪽

사업의 경우 특별용자계획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원 신설을 기반으로 민관합동 전략기획 그룹을 통한 기능 활성화, 매입자금 특별용자 통로마련 등이 계획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성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자립생활 지원**)은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기보다 장애여성 평생교육 및 자립생활 지원 확대예산에서 보이듯이 여성장애인 사회성향상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인 평생교육과 자립생활 지원 내용이다. 여성장애인의 장애 특성, 처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한 세심한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되며 특히, 자립 생활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역할’로만 한정해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장애’를 넘어서는 역할요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렇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은 부재하거나 상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예산계획에서도 드러난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누림하우스로 통합 운영 예정을 하고 있으며 정착금지원 규모는 15백만원에서 20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전기,저상버스 확대목표는 연도별 도입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4337억원 규모로 이뤄지게 된다. 여기에 더해 특별교통수단 광역통합시스템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6298억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 사업의 경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민선7기 지속사업으로, 1개소 운영되며 피해자지원프로그램 가동에 9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은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착취 피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성착취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방, 긴급구조, 피해자 맞춤형지원서비스, 유관기관 연계 기능을 강화한 총괄센터 설치·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에 비해 예산 18억원은 너무 소극적인 예산계획이다.

1인 가구, 고령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특색사업 발굴 및 사업확대를 위한 **행복마을 관리소 사업**)은 민선8기 ‘1인가구지원’추진체계를 보완함으로써 일정부분 실효성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 내실있는 정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된 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의 경우 반드시 평가를 필요로 한다. 경기도권역 지역/세대/계층 등 복합적인 수혜자분석과 더불어 여성1인 가구 안전한 일상을 위한 사회문화바꾸기 캠페인이 연동되도록 하고 예산반영되어야 한다.

**돌봄 공공성강화**) 측면에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는 지방선거에서 빠지지않는 의제다. 민선8기 들어 1800억이 계상되어 있으며 도비 신규사업으로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 전환 지원(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 민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지원)/신축 지원(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지역 간 불균형 및 접근성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해 지역 내 국공립 「설치비율 + 이용률 + 정원충족률」기준 선정 및 신축비 우선 지원·개원준비금 지원/인건비 등 신규 설치 어린이집 개원 준비업무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등이 그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다함께돌봄센터 2026년까지 262개 소로 확대, 2026년까지 긴급돌봄센터 필요 시군에 센터 설치 등에 일정규모의 예산을 세워둔 것을 알 수 있다

변화하는 환경가운데 디지털 속도는 노인세대에서는 새로 습득해야만 하는 분야다 민선8기 정책공약에 경기도 경로당 스마트화는 의미있는 정책사업이다. 여기에 더해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또한 일상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의미 있다 평가한다. 12억원 정도의 비교적 적은 예산이긴 하나 노인세대의 고립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노인 돌봄매니저 시범사업 계획도 의미있게 평가하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갈 필요가 있다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고, 탄소중립 사업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 건설, 산업정책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이를 총괄하고, 경기도정에 탄소중립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경기국제공항추진과 같은 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 탄소중립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257. 탄소중립 추진 구축 및 기후대응기금 설치」 사업은 김동연 지사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선언과 경기 RE100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민선 8기 임기 내 감축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며 당초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 일정에 비해 기후환경에너지국 2023년도 업무보고<sup>35)</sup>에 따르면 사업 추진이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2022년 4분기 기후대응기금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2024년 기금 조성 목표로 변경되었고 2023년 7월 6일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했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은 2024년 4월 예정이며, 시·군 탄소중립 협의체 구성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 예정이라 2024년 내 구성이 불투명한 상황임을 공약실천계획서를 통해 확인했다.

기후대응기금은 현실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재원 마련과 시·군 조례 제정과 기금 조성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임기 내 경기도 시·군까지 기금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을 구성했지만, 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활동이 미미하다.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와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구성이고, 경기도 탄소중립 협의체 구성,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 1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경기도형 녹색교통 인프라 구축은 전기차 충전기 확대 사업이 중심으로 경기도의 대중교통 분담률(29.4%)로 수도권 평균(39.4%)보다 낮아 주요 도심 내 교통혼잡 상황과 이로 인한 탄소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현황 분석에 비해 자전거도로망은 기

35)제366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3. 02. 09.목요일) 기후환경에너지국 2023년도 업무보고

존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차 이용률 감소없이 대중교통 분담률을 증가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확대 사업 등과 비교하여 대중교통은 혁신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없어 '대중교통 분담률 확대하겠다'는 계획자체가 현실성 없음이다.

### 3.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나타나지 않은 연대회의 '의제'

#### - 핵심과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경기도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대회의 구성원들의 판단이었다.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있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할 안으로 제시된 ① 경기도 재난약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정 ② 재난위기 상황에서의 정보접근, 고른 의료서비스 혜택, 소수자 혐오와 차별금지 등등 '경기도 인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국제적인 수준의 가치(경기도 재난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③ 주거복지서비스와 연계된 경기도 긴급임시주택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 ④ 경기도 차원의 긴급임시주택 확보 방안 마련' 요구였다 하지만 공약실천계획에서 누락되었다.

#### - 경기도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기반 확대

우리나라 의료수준과 인구 대비 병상 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 공공의료원은 221개소로 전체 병원의 5.7%에 불과하다(일본 18.3%, 독일 25.5%, 프랑스 44.7%). 전국 229개 시군구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곳은 140개소,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곳은 141개소, 경기도의 경우 100병상 이상 공공의료원 7개소에 불과하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59명으로 서울(3.12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경기 북부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나 응급시설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의 수정을 통해 도내 취약지 및 주요 거점에 공공병원 확충, 공공병상확보 및 재난상황 대비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① 민간의료 서비스와의 경쟁이 아닌 공공의료에 집중 ② 보건진료소와 보건의료원에 대한 지원 확대 ③ 의료인력의 충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 - 성인지 관점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재난관리와 관련해 성별분리 통계를 시작하는 것부터 관련 정책이 성인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민행동요령'에 성별·재난 취

약자 특성을 반영하고 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내용은 수정을 해 나가야 할 것이며 재난 취약자 뿐만 아니라 이들과 동반한 자에 대한 행동요령 개발과 보급. 재난 약자인 영 유아와 아동, 1인 가구 여성, 돌봄 여성, 여성 일반, 임산부, 고령여성에 대한 생애맞춤형 안전 매뉴얼 마련, <지하철 사고, 지진, 화재, 붕괴, 풍수해>등 재난별 가이드 북 마련 안전교육 실시<sup>36)</sup> 등이 정책반영되어야 한다. 경기도 긴급재난정책 선호도 조사 등이 매해 이뤄지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는 기초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향후 조례보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서 확인했듯이 재난 의료 인력의 필요성은 극명하다. 이에 대해 경기도 재난 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지원과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원 지원 강화 등 적극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해야 한다. ① 기후위기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 여성 대표성 확보 의무화, 해당 이행을 통계발표 ②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긴급지원체계구축 ③ 재난으로 인한 사망률, 자살률, 정신질환 유발율 : 성별, 연령별 통계 모니터링 및 지원 ④ 각 지역별 재난위기 대응 프로그램에 대해 성인지 관점의 모니터링과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확대 등이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전제조건이다.

#### -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 생활을 위한 권리 보장

- ①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반영(월 240시간, 2년간 지원) ② 장애인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③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 조례 전면 개정

#### - 여성 폭력과 혐오 없는 사회실현

- ①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담긴 조례개정 ② 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탈학교 여학생, 탈 가정 여성 청소년에 대한 안전한 환경 마련과 임시 보호시설 확충

#### - 경기도 여성 중심의 한반도 평화 실현

평화 안보는 국가 사무 또는 유엔연합사무로써 남북 간 대치상황에서의 변화 유무에 따라 유동적인 정책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성별/세대/지역 등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특히 '평화사업=안보사업'이라는 인식은 '여성=보호 받는 자, 남성=보호 하는 자'라는 젠더 위계를 만들었고 성차별주의를 유지/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하며 가부장성 강화를 야기해왔다. 평화안보사업에서 지역 여성의 경험과 삶이 고려될 수 있도록, 여성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제도적 보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미군 위안부 문제 구체화와 관련 조례 실효적 조치 마련 ② 탈북민 여성을 위한 심리치유 자립기반 지원 확대 및 관련 경기도 특화사업 확대 ③ 경기도 여성평화안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④ 남북여성 교류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아시아 여성평화심포

36) 대구여성회의 민선7기 의제 안 중 내용 가져옴.

지업 정례화 ⑤ DMZ여성평화걷기 정례화는 평화안보정책사업의 내용적 확장 요구다.

- 녹색전환 사회를 위한 자료로 ‘불평등 해소’, ‘녹색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건강지수 (자살 및 우울증 증상 등 정신건강 반영)’를 설정

① ‘녹색금융’지원 기구를 통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자금을 공급 ② 기후위기를 맞아 좌초되는 산업과 종사자 수를 전수조사하여 해당 산업과 근로자를 기후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 마련

- 탄소중립자원순환 전담부서 설치&탄소중립자원순환 시범사업 추진

① 통합정책을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자원순환, 에너지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설치 ②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건설하지 않고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시설을 경기도 시범사업 추진 ③폐기물 처리는 발생하는 기초 지자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를 우선으로 하며 광역합의를 통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하여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의 전폭적인 지원 ④폐수지류 유화장치, 유기성슬러지의 가수분해장치, 통합처리가 가능한 열분해 장치 등을 지역상황에 맞게 설치.

#### 4. 모니터링을 마치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졌다. 이는 개인의 건강권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중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강화 요구가 거셌다.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한 일상의 안전의 문제는 ‘재난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구조의 틀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따라서 지방정부 운영을 하겠다는 ‘정치인’들의 진지한 고민과 정치철학의 배경이 되길 요구했다.

연대회의가 제시한 다양한 사회적 의제는 ‘더 나은 정치’를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현장에서 길어올린 5대 핵심과제와 31개 분야별 의제는 그래서 구체적이며 현안이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실행방식이다.

①경기도민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가, 재난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실행 조건을 마련하고 있는가 ②경기도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직접민주주의의 확장과 속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선 8기 혁신적인 경기도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해 낼 수 있는가 ③이미 기후위기는 여러 징후로, 누적되어 나타나고 있다. 도민 삶 전체를 관통해야 하는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전환 정책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는가 ④사회적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시대 반영이라는데 경기도는 돌봄노동의 노동권과 이용자의 사회권의 균형을 통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돌봄’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가 ⑤경기도형

혁신 주택정책 시행을 통해 무차별적인 개발논리로부터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개혁과 공공성 강화를 담보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였다.

여기에 더해 각 분야별 과제로, 경기도가 인권 도시로써 가져야 할 기본 정책방향 세우기/도민 일상의 안전에 관한 과제 실현을 위한 정책 공약화/사회혁신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 낼 행정추진체계 강화/평화·통일에 관한 과제로써 경기도 민관평화통일 협력기구 마련을 포함하여 다양한 도민참여 확대 가능한 토대마련/문화 협치 플랫폼구축 요구/교육정책 개혁에 도정의 적극 개입 요구 등이다.

김동연지사(당시 후보)는 연대회의와 위 내용으로 정책협약했다.

민선8기 시작점으로부터 1년, 공약실천계획서에 의하면 경기도정의 공약 수는 전체 295개, 공약반영된 예산 총액은 38조4418억원(도비 8조 865억 원)이다. 분야별 공약은 크게 9개분야 ①성장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49개 ②주택·교통·일자리가 유쾌한 경기42개 ③문화·예술·여가가 일상이 되는 경기 25개 ④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경기 67개 ⑤미래세대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 20개 ⑥북부에 변화와 평화의 기회를 만드는 경기 15개 ⑦소통·협치로 만드는 자치경기 28개 ⑧기후위기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24개 ⑨사회적가치,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 25개 등으로 나눠 배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공약배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주관하는 '2022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선거공약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배경이 되었다.

그렇다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과 '연대회의와의 정책협약'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며 정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걸까?

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결론은 연대회의가 요구했던 '경기도 도정혁신위원회'가 <도지사 공약을 점검하는 경기도 도정혁신위원회>로 <민관협치위원회>는 정책제안 그룹으로 이원 운영되는 사례에서 보듯이 약속은 대부분 '일부 반영'으로 나타났다.

예로써, ①장기임대주택 확충 ②토지임대부분양주택 도입 ③주거안정을 위한 시범사업 적극 추진으로 제안된 정책대안은 <53.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호 공급 62.무주택자 대상 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마련 55.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추진 54.부동산 관련 세제 합리적 개선 등의 정책으로 부분 반영>되었다. 반면 공공택지에 대한 개혁의 핵심방향은 연대회의와 협약한 부분과 다르다.

여성 폭력과 혐오 없는 사회실현을 위한 정책적 접근은 민선8기들어서 여러 각도에서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사업 강화, 스토킹피해,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강력범죄 대응과 예방은 기존 정책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윤석열정부의 성평등정책에 대한 무차별적인 퇴행국면에서 그나마 경기도가 유지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씁

쓸한 평가다. 그러나 “경기도 공무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하려다 적발(2022.11) 초등학생 4명 성추행 경기도청 5급 공무원 구속영장(2023.05), 경기도청 공무원이 도 산하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여성을 스토킹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해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2023.05)”에서 보듯이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낮은 성인지감수성과 폭력을 대하는 저급한 태도는 여성폭력과 혐오없는 사회 실현의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며 취약한 정책실행과정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돌봄사회 실현 측면에서 공공성 강화는 오래동안 누적된 사회적 의제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며 맞닥뜨린 건강권과 재난불평등은 '각자도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재 인식케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응전략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연대회의와 정책협약한 내용과 더불어 진전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평가한다. '도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는 기존 민간시장으로부터의 저항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점에서 경기도의 추진의지를 점검해볼 수 있는 사업이다. 기존 민간어린이집 전환을 유도하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규모의 경우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등이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노인 복지정책 사업, 1인가구, 청년정책 등등에 있어서 성인지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지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한 점은 아쉬운 평가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2022년 7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중이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sup>37)</sup> 일정부분 탄소중립 녹색전환 정책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와는 별도로 경기도는 지난 5월 경기RE100 선언하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연대회의가 제시한 <탄소중립자원순환 전담부서 설치>는 <257. 탄소중립 정책 결정 및 실행 기구 마련 운영>에 일부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추진체계에 있어서는 <환경국 → 기후환경에너지국> 명칭이 변경되고, <환경정책과 → 기후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정책과 → 에너지산업과>로 변화가 있음도 확인했다.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 기후환경 에너지국과 기후환경정책과가 신설되었으나 일부 업무분장을 재정리한 수준으로, 기존 조직과 변별력이 있어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가장 기초 단위인 시민사회의 역할강화' 의제처럼 사회 의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이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권리 옹호의 지지기반이며

37)2023. 3. 28 [보도자료] 김동연 “기후변화가 인류위협, 기후도지사가 돼 대응에 앞장서겠다.”  
2023. 4. 24 [보도자료] 김동연, “기후위기에 정면으로 부딪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선도자 될 것”

국가와 시장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따라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기 어려운 분야일수록 공약실천계획으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모호한 선언으로 갈음하고 있다. 도민의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문화적인 변화의 지점을 짚어낼 수 있는 인권정책과 이미 시장에 잠식된 주택정책의 예에처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인 노력과 저항은 ‘계획’에서 빠져있거나 ‘사업의 일부분’으로 남겨져 있다. 따라서 반드시 맞닥뜨려 문제해결을 해나가야 하는 지점에서 망설이거나 에둘러 돌아가거나 선언으로 마침표를 찍거나 등이다. 복기해보면, “김동연지사의 민선8기? 색깔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세간의 평가가 떠오른다는 점이다.

지난 6월말 기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이행률이 27.5%로 집계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공약 295개 중 94.6%인 279개 공약이 임기(2022년 7월~2026년 6월)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sup>38)</sup>는 긍정적인 평가다.

하지만 ‘공약이행율’이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을 담보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나타나지 않은 의제와 대면해야 하며 재 과제화해야 한다.

먼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 조례제/개정, 가칭)경기도 재난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 차원의 긴급임시주택 확보 방안 마련 등이 가시화되어야 하며 ‘녹색금융’지원 기구를 통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자금을 공급한다거나 탄소중립자원순환 전담부서 설치&탄소중립자원순환 시범사업 추진 등은 민선8기 정책과제로 충분히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선8기 정책성과로 기록되길 기대한다.

---

38) 뉴시스1.2023.08.03.(인터넷검색)